



관계부처 합동

보도자료

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

하나된 열정
하나된 대한민국



보도일시	2018. 1. 23(화) 09:30 이후 보도	배포일시	2018. 1. 23(화) (총 9매, 첨부 별도)
담당자	국무총리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	과장 김윤혜	044-200-2275
		사무관 유주연	044-200-2376
	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	과장 김부희	044-202-7682
		사무관 윤혜영	044-202-7684
	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	과장 고용석	044-201-3573
		사무관 허원석	044-201-3574
	산업통상자원부 산업재난담당관	과장 최석진	044-203-5580
		사무관 박형진	044-203-5581
	행정안전부 안전기획과	과장 조덕진	044-204-4110
	서기관 김해	044-205-4130	
기획재정부 일자리경제과	과장 이주섭	044-215-4960	
	사무관 김용준	044-215-8514	
중소기업벤처부 인재혁신정책과	과장 윤범수	042-481-4333	
	사무관 이상전	042-481-1618	
환경부 폐자원관리과	과장 한준욱	044-201-7360	
	사무관 노우영	044-201-7363	
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	과장 송정원	044-200-4583	
	사무관 안광현	044-200-4587	

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망자수 절반 감축을 위한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 발표

- ◇ 고위험 분야 집중관리 및 안전우선 문화 확산
- ◇ 11개 부처 참여, 4대 분야·98개 세부과제
- ◇ ‘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’에 포함하여 범정부 추진체계 구축

□ 정부는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고,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「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」을 수립·발표하였다.

-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.10 발표한 신년사에서 ‘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’를 집중 추진하여 2022년까지 산업안전을 포함한 3대 분야의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.
- 이에 1.23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여
 - 건설·조선 등 사고 다발 고위험 분야 집중 관리, 현장관리 시스템 체계화, 안전우선 문화 확산 등 내용을 포함한 「산업재해 사망 사고 감소대책」을 의결하였다.

1. 산업재해 감축 목표

- 동 대책은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명확한 목표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.
- 감축 목표는 ‘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고사망만인율(노동자 1만명당 사고사망자 수) 절반 감축*’으로 설정하였는데,
 - * 사고사망만인율: (‘16) 0.53‰ → (‘22) 0.27‰
 - 이는 독일 등 주요 선진국 보다 2~3배 높은 수준인 사고사망만인율을 통계를 공개하는 OECD 국가 평균보다 낮은 수준까지 감축하는 것이고
 - * ‘14년 사고사망만인율 통계를 발표한 OECD 15개국 평균: 0.30‰
 - 과거 정부에서 사고사망만인율 절반 감축에 통상 10여년이 소요되었던 점을 감안할 때 감축기간을 2배 이상 단축하는 것이기도 하다.
- 따라서,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도개선, 현장 관리 강화, 산업구조 개선 등을 포함한 범부처 차원의 노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.

2. 중점 추진과제①: 주체별 역할·책임 명확화 및 실천

□ 산재를 감축하기 위해

- 우선, 법·제도를 개정하여 발주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규정하고, 원청의 안전관리 역할을 확대할 계획이다.
- 이는 지난해 8월 발표한 「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」에 포함된 내용을 구체화시킨 것으로
 - 법령 개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상반기 중 「발주자 안전관리 가이드라인」을 마련하여 공공발주기관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.
- 원청에 대해서는 원청 관리하의 모든 장소에서 하청노동자의 안전까지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,
 - 수은·납·카드뮴 제련 등 高유해·위험작업은 도급자체를 금지하게 된다.

□ 사업장에서는 노사가 함께 위험요인을 평가하여 자체적으로 개선하는 '위험성평가'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점검하고

- 원청사업주가 안전보건 공생협력프로그램을 통해 하청사업주의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지원하도록 인센티브를 강화*할 계획이다.

* 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부여 등

- 노동자에 대해서는 보호구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계도·적발을 강화하고
 - 공공발주공사는 안전수칙 2번 위반할 경우 즉시 퇴거조치 하게 된다.
- 또한, 위험상황 발생 시 노동자가 긴급대피 후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령에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,
 - 하청노동자가 위험상황을 공공발주청에 직접 신고하는 위험작업 일시중지 요청제도(Safety Call)도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산할 계획이다.

3. 중점 추진과제②: 高위험 분야 집중관리

- 산재 사망사고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건설, 기계·장비, 조선·화학 등 분야에 대해서는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게 된다.

< 건설 분야 >

- 착공 전 수립하여야 하는 안전관리계획 내용에 지반조건 등 현장분석 항목을 보완하고, 계획 승인 전 전문기관의 검토를 의무화할 계획이다.
- 대형 건설사의 자율개선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100대 건설사까지 매년 사망사고를 20% 감축하도록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,
 - * '17년 50대 건설사까지 시행한 결과 사망사고 23.5% 감축 성과
- 대형건설사에서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대형 인명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전국 현장에 대한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.
- 아울러, 안전관리가 부실한 건설사업주에 대해서는 주택기금 신규 대출 제한, 선분양 제한 등 영업상 불이익도 부여하게 된다.

< 건설기계·장비 분야 >

- 타워크레인의 경우 지난해 11월 발표한 「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 대책」을 충실히 이행하여 임대 및 사용과정에서의 주체별 책임을 명확화 할 계획이다.
 - 또한, 발주자가 원청-임대업체간 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등 추가적인 개선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.
- 건설기계·장비 안전사용을 위해 안전검사 미수검·불합격 기계·장비에 대한 과태료 수준을 대폭 상향(50만원 → 최대 500만원)하고,
 - 사고예방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일제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.

< 조선·화학 분야 >

- 조선업은 현재 운영 중인 '조선업 국민 참여 사고조사위원회'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유사사고 방지를 위해 구조적 원인까지 개선하고
 - 구조조정 시 안전투자 소홀, 과도한 안전인력 조정 등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지도할 예정이다.
- 화학업은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·감독하고,
 - 정기적 위험작업과 함께 돌발적으로 실시하는 위험작업까지 사전에 파악하여 위험요인을 관리할 계획이다.

4. 중점 추진과제③: 현장 관리·감독 시스템 체계화

- 앞으로는 산업안전 감독의 사전예방 기능을 강화하고, 안전 관련 불공정 관행까지 개선하는 등 구조적 문제까지 해결하여 현장을 제대로 변화시킬 계획이다.
- 이를 위해 감독 시 투입 인원과 시간을 늘려 법 위반 사항 적발, 기술적 요인 점검과 함께 사업장의 효과적인 안전보건시스템 구축까지 지도할 계획이다.
 - 또한, 증원된 감독 인력을 활용하여 대형사고 발생 사업장을 특별 관리하고
 - 취약시기·위험요인에 대해 사전교육·자율개선 기간 부여 후 이행 상황을 불시점검 하여 현장의 경각심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.
- 건설공사의 공정한 원·하도급 체계 구축을 위해 원청의 직접시공 비율 확대, 다단계 하도급 방지방안 등을 포함한 '건설산업 혁신 방안'을 수립·발표하고,
 - 건설업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안전관리비 미지급, 부당 특약 요구 등도 점검할 예정이다.

5. 중점 추진과제④: 안전인프라 확충 및 안전중시 문화 확산

< 안전기술 개발·보급 >

- 산재감축을 위해서는 안전기술을 활용한 재해발생 억제도 중요한 만큼 안전기술 개발과 사업장 보급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.
- 산재다발 분야, 산업현장 수요 등을 반영한 R&D를 추진하여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
 - 민간이 보유한 안전기술 중에서도 아이디어는 우수하나 시장경쟁력이 미흡한 기술을 대상으로 제품개발 비용을 지원*할 계획이다.

* '22년까지 총 115억원 투자('18년, 25억)

- 또한,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술은 의무화*하여 더 많은 사업장에서 사용토록 하고,

* 예) 환경미화원 안전장비, 타워크레인 충돌방지 장치, 맨홀입구 표지판

- 신기술 적용 제품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재정지원 품목에도 반영할 계획이다.

< 안전보건교육 혁신 및 안전중시 문화 확산 >

- 안전교육도 체험과 현장중심으로 개편한다.
 - 2020년까지 체험교육장을 현재의 2배인 10개소까지 확충하고, 매년 VR(가상현실) 콘텐츠를 205종씩 개발하여 실감나는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.
 - 현장에서는 작업 전 10분 안전교육이 생활화되도록 지도하고, 경영자부터 안전을 중시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CEO 연수과정에 안전보건 교육과정도 신설한다.

□ 안전중시 문화 확산을 위해 가장 빈발하는 산업재해 유형인 추락 재해 예방을 위한 장기 집중 홍보를 추진하고,

○ 매월 4일, 24일을 '점검의 날'로 지정*하여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대대적 캠페인도 전개한다.

* 매월 4일: 안전점검의 날, 매월 24일: 건설기계·장비 점검의 날

○ 안전관리 우수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체제, 안전장비현황 등을 공개하여 벤치마킹도 유도할 계획이다.

6. 이행계획

□ 향후 동 대책은 자살·교통사고와 함께 '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'의 일환으로 총리실 주도의 범정부 협의체에서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게 된다.

□ 정부는 동 대책에 포함된 과제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며,

○ 산업안전보건법, 건설기술진흥법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도 금년 중 개정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.

○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산업안전 감독 혁신방안, 건설 산업 혁신방안 등 후속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이다.

○ 아울러, 관계부처와 점검을 실시하고, 주요 기업 경영진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현장 관리도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.

붙임1. 산업재해 감축목표 및 추진전략

붙임2. 4대 분야 주요 추진과제

별첨.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

생명·안전 최우선 일터 조성

정책목표

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절반 감축

- 사고사망만인율 0.27, 사고사망자 500명 이하 달성 -



붙임 2

4대 분야 주요 추진과제

구분	주요내용	세부 이행계획	소관 부처
1. 주체별 역할·책임 명확화 및 실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발주자 안전관리 의무 규정 발주자 가이드라인 마련 발주자 가이드라인 적용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공공발주기관 우선 적용 	노동부 노동부 국토·산업부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원청의 안전관리 의무 강화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산안법 개정 	노동부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위험성 평가 이행점검 공생프로그램 인센티브 강화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감독 및 기술지도 시 점검 정부지원사업 가점부여 등 	노동부 노동부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공공발주공사 관리 강화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안전수칙 2번 위반시 퇴거 	국토·산업부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노동자 작업중지 요청권 강화 위험작업 일시중지 요청제도 확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산안법 개정 발전5사 우선 적용 → 공공기관 확산 	노동부 산업·국토부
2. 高위험 분야 집중관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안전관리계획 보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현장분석 강화, 전문기관 검토 의무화 	국토부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'18.4부터 설치·운영 	국토부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00대 건설사 목표관리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망사고 20% 감축목표 수립추진 	노동부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안전관리 부실 건설사 불이익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영업상 불이익 부여 	국토부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타워크레인 개선계획 수립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방안 마련 	국토부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안전검사 미수검·불합격 기계·장비 과태료 상향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산안법 시행령 개정 	노동부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조선업 국민 참여 사고조사 위원회 결과를 반영한 제도개선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'18.3 공청회를 통해 결과 발표 예정 	노동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돌발 위험작업까지 관리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화학사고 위험경보제 관리 대상 확대 	노동부	
3. 현장 관리·감독 시스템 체계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산업안전감독 혁신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후속대책 마련·발표 예정 	노동부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건설공사 공정한 원하도급 체계 구축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후속대책 마련·발표 예정 	국토부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건설업 안전관리비 미지급, 부당특약 요구 등 점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7개소 점검 예정 	공정위
4. 안전인프라 확충 및 안전중시 문화 확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산업현장 수요를 반영한 R&D 추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국민생활연구 프로젝트 추진 	과기부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민간기술 제품개발 지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재난기술 사업화 성장기반 투자 	행안부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안전보건교육 혁신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체험교육장 확충, VR콘텐츠 개발 	노동부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중소기업 CEO 연수과정 안전 보건교육 신설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교육과정 신설 	중기부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안전보건 홍보 강화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추락재해 집중 홍보, 건설 기계·장비 점검의 날 운영 등 	노동부